

“중·고교 용지 못 준다” ... 부영, 혁신도시 고층 아파트 고집

한전공대에 기증 골프장 잔여지...각계 반대 의견·권고 무시
환경영향평가 앞두고 녹지지역을 3종 주거지로 변경 '고수'

한전공대 부지를 기증하고 남은 골프장 잔여지에 고층 아파트단지를 신축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주)부영주택이 나주시, 전남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권고나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당초 계획을 고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지 기증의 대가로 무리한 용도변경을 강행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고층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한 근거로 잘못된 통계까지 인용하고 있어 전문가, 나주시, 전남도 등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나주시는 지

난 13일 '부영CC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했다. 한전공대 부지(40만㎡)를 제외한 빛가람동 908번지 부영CC 잔여지 35만2294㎡를 기존 자연 녹지지역에서 고층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데 있어 평가 항목과 범위와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해당 계획의 적정성·입지 타당성·환경보전계획과의 적합성 등을 분석한 뒤 나주시 관련 부서 협의, 나주시의회 의

견 청취,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공고에서 (주)부영주택은 35만2294㎡의 잔여지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30만6926㎡를 아파트 용지, 나머지 4만5367㎡는 유치원과 초등학교(1만5000㎡), 완충녹지(1만7830㎡), 도로(1만2537㎡)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서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당국의 요구, 나주시의 권고, 지역 각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아파트 신설에 따라 다수의 학생 유입이 예상된다. 이유로 초등학교·중학교 설립 용지 3만㎡, 고등학교 용지 2만7000㎡를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나주교육지원청 역시 "유치원과 초

교, 중학교 부지가 각각 1곳씩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자연녹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특혜라는 부정적인 여론에 나주시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부영주택 측에 권고했으나 이 역시 거부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검토 결과 53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있어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이 250% 이하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부영주택 측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영주택 측의 계획안은 나주시의 도시계획관리 지침인 '용적률 175% 이하, 최고층 25층 이하'까지 넘어서고 있어 그 배정에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부영주택 측이 대규모 고층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해 근거로 제시한 인구 통계 역시 오류라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016년 이후 인구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빛가람혁신도시의 인구 통계를 부영주택 측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혁신도시권 인구 증가율이 24.1%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빛가람혁신도시(빛가람동) 인구는 지난 2014년 3895명, 2015년 1만2452명(8557명 증가), 2016년 2만1405명(8953명), 2017년 2만8266명(6861명), 2018년 3만819명(2553명), 2019년 3만2478명(1659명)으로 2016년을 정점으로 증가세는 뚜렷하게 떨어지고 있다.

부영주택 측 용도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인 일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위원들

은 이에 따라 ▲유입 인구 수요·공급에 대한 예측·분석 등을 통해 지구 지정(공동주택부지 등)에 대한 필요성·계획 규모 등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주변 아파트 용도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고려한 토지 용도 결정 ▲한전공대 등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사업 추진 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 지역개발 전문가는 "(주)부영주택이 제시한 방안은 검토, 심의 과정에서 수정·개선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역개발이 지역 발전을 위해 순수한 의지에서 한전공대 부지를 기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나주·순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교사 해임 논란·스쿨 미투 ... 사립학교 개혁 쟁점

광주·전남 교육청 국정감사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광주 명진교(도연학원) 손오 교사 해임을 둘러싼 논란과 스쿨미투 등 사립학교 개혁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는 도연학원 김인전 전 이사장과 손오 교사가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손 교사는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김 전 이사장은 국감장에서 부당 해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6면>

손 교사는 "최인욱 전 이사장(김인전 전 이사장 부인)으로부터 교사 채용 대가로 5000만원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부한 뒤 검찰과 교육청에서 관련 진술을 했다"며 공익 제보자로서 보복성 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이사장 측은 국감장 밖에서 기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고 "손비라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며 "손 교사는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당한 해임이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도연학원 초대 이사장은 김 전 이사장 부인, 2대 이사장은 딸이 딸이고, 이사장을 지낸 딸을 포함해 두 명의 자녀가 명진교 교사로 채용됐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손



광주와 전남, 제주교육청 국정감사를 위해 20일 광주를 찾은 유기홍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교육위원들이 교육청 국감에 앞서 광주시 서구 유덕동 극락초등학교를 방문, 교육 환경 등을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교사 문제에 대해 저지도 안타깝고 당황스럽다"며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결과를 보고 만약 해임이 부당하다고 하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원승인 취소 등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이사장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이 잘못됐다는 결정이

나오면 손 교사를 복직시킬 것이냐"는 윤영덕 의원의 질문에 "자문변호사와 상의해 결정을 내리겠다"며 "4년 동안 이사장이라고 내 마음대로 한 적이 없다"는 등 묵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감은 오전 전남대와 전남대 병원 등에 대한 일정이 늘어지면서 다

소 지연된 가운데, 핵심 사안으로 예상됐던 영광 모 중학교 성추행 사건교육과 교구(안락용 스크린) 납품 비리 의혹 관련 사안을 다루지 못하고 학생 운동선수 인권침해 문제, 소규모 학교 살리기 노력 등에 대한 질의에 한정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종합 판단에 한계”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은 20일, 정부가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내놨다. <관련기사 3면>

조기폐쇄의 핵심 근거였던 경제성 평가 부분에서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작 감사의 목적인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판단을 내놓지 않아 정치적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다"며 야당에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사망선고를 한 것"이라며 '국정농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타당성 논란의 핵심 쟁점인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판매단가 기준을 변경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측정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가동중단 시 줄어드는 비용 역시 과다하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산업부 직원들에 대해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업무의 신뢰성

을 저해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경우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내버려 뒀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감사 과정에서 이른바 '감사 방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감사원은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안전성이나 지역 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결정의 당부(當否)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관련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고, 한수원 이사들의 조기폐쇄 결정에도 배임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신 백 전 장관의 감사 결과는 향후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W

IOPE

RETINOL EXPERT
RETINOL 0.1%

2weeks
고함양 고도도 케라틴이 분기된
빛자 주름 용출 단 2주만에 개선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인·40-50대 성인 여성(대형) 2019.08.16-10.17 10명(10명)이 참여한 실험에서
고려사항 없음 080-023-5454 | www.iope.com